

광주시, 시립예술단 특별감사 추진

인사문제·수당 부정지급 등 의혹 해소 위해

문인 부시장, 시의회 현안질의서 “적극 검토”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시립예술단에 대한 광주시의 특별감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인 광주시행정부시장은 15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용집 의원(미래)의 긴급 현안질의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립예술단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감사 실시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문을 통해 “인턴단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문제와 각종 수당 부정지급 사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사례비 수수 여부, 대규모 공연시 허위영수증 제출, 의상·소품관련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일부 예술단원과 문화재단 사이에 유착관계 형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부시장은 “지난 3월(시립예술단에 대한) 자체감사가 실시됐다”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예술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각계에 수습이 제기된 개혁방안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위상정립을 통해 단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예술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부시장은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본회의 직후 윤장현 광주시장도 김효성 문화관광정책실장에게 TF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시립예술단 개혁방안으로 ▲사무국설치 ▲법인화 ▲단무장 순환보직제 ▲예술회관 관장의 개방형 직위화 ▲예술단의 독립성 확보 ▲신규 및 단원평가시 100% 외부기관 위탁 등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시교육청 추경안

시의회 임시회 의결

예결위·윤리위 위원 선임도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는 15일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13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시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8485억원보다 5329억원(13.9% 증가) 늘어난 4조3814억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81억원이었다.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조6923억원 보다 1035억원(6.1%증가) 늘어난 1조7958억원으로 의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회에 계류 중이었던 ‘광주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과 동의원 4건을 의결했고, ‘호남선 KTX 증편 및 승정역 시설개선 건의안’도 채택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는 박춘수·조오섭·문태환·전진숙·이정현·김종찬·김영남·이은방·임택 의원 등 9명을 선임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철의·임택·서미정·전진숙·반재신·이정현·김영남·문상필·박춘수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현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임택 위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진숙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남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는 하나! 만나야 통일!’... 6·15 15주년 기념식

15일 광주 YMCA무진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광주 지역 기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우리는 하나! 만나야 통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신선으로”

25일 광주·전남 국회의원 간담회서 촉구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와 관련 광주·전남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전남도가 노선과 건설 방식의 조속한 결정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뿐 아니라 호남고속철 1단계(용산~광주 송정) 증편, 송정역 사인프라 확충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전남도에서 우기종 정무부지사가,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주영순 의원이 참석

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국토부는 나주와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로 가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나주를 거쳐서 목포로 가고, 합평에서 분기해 무안공항을 종착역으로 하는 지선을 놓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와 국토부의 안으로 하면 2조4731억원의 사업비가, 기재부 안으로 하면 1조3427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남도와 국토부는 광주 송정~목포 구간 중 43.9km는 새로 깔고, 33.7km는 기

존선을 보강해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합평에서 무안공항까지 16.6km만 신선을 놓고 광주 송정~나주~목포 구간은 기존선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사업이 확정돼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며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실시계획을 거쳐 2017년 착공해서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기간은 기재부, 국토부·전남도안 모두 2017년~2020년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김민중 “제2순환로 하이패스 조속 설치될”

광주시의회 김민중(광산 4) 의원은 15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에 하이패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협상이 지지부진해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곧 도로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순환도로는 공공성이 강



한 기반시설인데도 민간 사업자가 독점 운영 등 우월적 지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가급적 상반기 내 사업비 부담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이패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심철의 “상록회관 부지 시민 품으로”

광주시의회 심철의(서구 1) 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수십년간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록회관 부지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녹지공간으로서 역할은 이제 끝났다”면서 “광주시가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남 “市,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사과를”

광주시의회 주경남(서구 4) 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60억원(시비3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막무가내식으로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행정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 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광주시에 예산 심의권 침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



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광주시가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사전 보고나 심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불법 행정의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심의를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가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 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의원행동 강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운영위에 상정된 뒤 7개월만에 통과됐다.

모두 33조 구성된 이 조례는 인사청탁 금지,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이권개입 금지, 금품 수수·향응 접대 금지 등 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활동비

등을 받아 직무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경조사를 알리거나 공용물의 사적사용도 금지된다. 외부강의·회의 참석이나 영리행위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선언적 의미가 강한 기존 윤리강령 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를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조례를 통과시킨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경북, 충북, 전북, 부산 등 8개 시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